

허용되는 금품 등 상한액

- 상한액 한도 내에서 부조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선물·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

금품 등의 종류	상한액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 5만원 (단,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 5만원 (단,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음식물	· 3만원

참고

-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됨
-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됨



식사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

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신고접수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인터넷 신고) 청렴신문고 신고센터
(팩스) 국민권익위원회(044-200-7972)
(우편·방문 접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외교부 임직원 신고센터)
▶ 감사관 핫라인(외교포털)
▶ 부조리 신고센터: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국민 참여→신고센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보호조치	·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신변보호	·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한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보상제도 (보상금·포상금)	· 보상금(최대 30억원)-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최대 2억원)-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청렴한 외교부를 위한 **청탁금지법·공익신고 매뉴얼**

청렴,
당신의 얼굴입니다.



청렴이란 무엇일까요?

- ▶ 반부패: 법령·지침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 준수
- ▶ 투명성: 정부 및 사회조직 의사 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
- ▶ 책임성: 직업 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

청렴, 왜 중요할까요?

- ▶ 부패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청렴은 국부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10점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약 0.5%포인트 상승합니다.
(‘17.12월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

청렴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 청탁금지법!

- ▶ 목적
부정청탁,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 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 적용대상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부정청탁금지

금지내용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 등)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품 등 수수금지

금지내용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